

신용카드와 신용불량자 문제의 재조명

| 허 찬 국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용카드와 신용불량자 문제의 재조명

1판1쇄 인쇄/ 2006년 1월 3일

1판1쇄 발행/ 2006년 1월 10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노성태

편집인/ 노성태

등록번호/ 제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 3771-0001(대표), 3771-0057(직통)/ 팩스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6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값 3,000원 / ISBN 89-803-1-372-1

Contents

요 약

- I. 문제제기 및 결과요약 / 13
 - II. 신용불량자 문제의 배경 / 16
 - 1. 신용카드와 신용불량자 / 16
 - 2. 신용카드 신용 급증: 공급자 행태 / 17
 - 3. 신용카드, 단기 현금 조달수단 / 20
 - III. 소비지출 증대, 카드대출 급증과 신용불량자 문제 / 25
 - 1. 카드 채무와 소비지출 추이 / 25
 - 2. 목적별 가계 신용 종류 / 29
 - 3. 사업 목적의 카드신용 사용 / 30
 - IV. 신용카드 관련 정부대책의 문제점 / 38
 - 1. 소비자 신용 관련 문제 악화와 정부의 대응 / 38
 - 2. 신불자 지원대책 / 46
 - V. 신용불량자 관련 정책의 문제점 / 51
 - 1. 초기 단계 대응의 문제점 / 51
 - 2. 문제 본격화 시기의 정책선택,
책임정도와 유리된 균등 비용분담 / 53
 - 3. 신용불량자 구제 정책 / 54
 - 4. 시사점: 자의적 시장개입 중지하고,
불가피한 적기시정조치는 과감히 펼쳐야 / 56
- 참고문헌 / 60

신용불량자 해소 대책에 책임소재도 고려해야

I. 신용불량이나 카드사 부실은 감독당국, 카드사, 신불자의 합작품

□ 신용불량자 발생 주원인은 카드관련 채무 불이행, 특히 현금서비스 급증

○ 전체 신용불량자 중 신용카드 관련 사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말 21.3%에서 2004년말에는 67.3%로 증가

— 2000년 신용불량자 수는 208.4만 명(카드관련 비중 21.3%)이었는데 2002년말에는 263.6만 명(카드 비중 56.7%), 그리고 2004년말에는 361.5만 명(카드 비중 67.3%)으로 빠르게 증가

○ 1999년 5월까지 70만원으로 제한되었던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철폐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

— 1998년 카드사용 실적은 현금서비스 32.7조원, 판매신용 30.9조원(합계 63.6조원)이었고, 1999년에는 현금서비스 48.1조원, 판매신용 42.7조원을 기록했으나, 2002년에는 현금서비스 357.7조원, 판매신용 265.2조원(합계 622.9조원)으로 급증

□ 수요측면에서 카드 채무증가는 자영업자의 현금서비스 사용이 크게 작용

○ 이 기간 카드 채무규모나 증가세에 소비지출보다 자영업자의 현금서비스 사용이 더 중요하게 작용

- 1999년 민간 가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은 268.2/96.8(=2.77)이었으나 2001년 319.2/472.7(=0.68), 2002년 348.5/678(=0.51)로 빠르게 증가

- 2004년에 행해진 신불자 대상 서베이 결과조사에 의하면 신불자 등록 당시 전체의 43%가 자영업자였던 점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

□ 공급측면에서 정부개입을 염두에 둔 카드사들의 도덕적 해이 표출

○ 카드사들은 위험발생 시 예상비용을 과소 책정하고 단기 초과수익 증대를 위해 공격적 행태를 표출하는 등, 정부개입을 염두에 둔,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 발생

○ 카드사들은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추세에 편승하여 대량 발급한 후, 부대업무인 현금대부업에 치중

- 1999년 3,900만 장에 머물렀던 신용카드 발급수가 2002년 말에는 10억4,800만 장으로 크게 증가

- 동 기간 동안 판매신용 이용실적(개인)은 42.6조원(1999년)에서 265.2조원(2002년)으로 약 6배 증가한 반면 현금서비스 금액은 48조원(1999년)에서 358조원(2002년)으로 연 약 7.5배 증가

○ 수익성 측면에서도 카드사들은 조달금리에 비해 높은 현금 서비스 수수료 수입에 영업력 집중

- 2000년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24~29%인 데 반해 카드사 조달금리는 9.1%였고, 당시 은행의 대출금리가 8.41%였던 것을 감안하면 금융기관들이 카드채에 투자할 유인 또한 매우 컸음.

□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실패로 문제 악화

○ 현금서비스 한도 철폐로 단초를 제공한 후, 초기에 감독당국은 현금서비스에 대한 과감한 적기시정조치가 필요했으나 실패하여 문제 더 악화

○ 2003년 이전 카드사 업태와 관련된 문제를 인지하고 조치를 취했으나 잠재위험 관리보다는 수수료 인하에 초점을 맞춘 감독이었음.

- 2001년말부터 카드납탈에 대한 제한 등 시의적절한 문제점을 인지했으나, 카드사의 현금대금업 급증에 대한 대응은 지나치게 점진적이었고, 카드사의 고율 수수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하여 수수료 인하 유도에만 주력

- 현금서비스 총액설정 등 보다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했음.

□ 신불자 양산은 경제둔화보다 카드신용량의 급증과 질의 악화가 더 큰 원인

○ 신용카드 채무 급증과 거시경제 부진이 겹치며 신용불량자 양산은 불가피한 추세였지만, 2002년 이후 거시경제 상황 악화보다 카드신용량의 급증과 질의 악화가 더 큰 원인

○ 무분별한 고리 현금대출 급증은 필연적으로 다수의 채무 불이행을 낳을 수밖에 없었음.

- 1997년 카드 현금대출 한도 70만원이 철폐된 이후 3년만에 평균 현금서비스 한도는 2천3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해서, 당시(2002년초)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85%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음.

- 2002년 소비증대에 힘입어 7% 성장을 기록한 후, 2003년에는 극심한 내수부진으로 3.1% 성장에 그쳤고, 취업자 증가세도 이 기간 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소득기반 취약 계층의 소득흐름에 부정적으로 작용

○ 1998년 외환위기에 이은 거시경제 충격이 훨씬 심각했지만 당시 신용불량자 문제는 제한적이었음.

- 외환위기 당시 카드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작고 사용자들의 신용도가 높았던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음.

□ 당국은 책임소재에 근거한 원칙적인 대응보다 문제규모 축소에 급급

○ 당국은 카드사 부실문제가 본격화된 시기 이후 카드사 부실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전적으로 카드채 관련 금융시장 여파 최소화에 주력

- 이런 관점에서 보면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가가 중요치 않으며, 잘잘못에 관계없이 자의적 개입과 관련 비용을 책임과 무관한 1/N 식으로 분담토록 했음.

- 거시경제 상황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어 카드관련 문제가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단기적으로 문제 축소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내수부진의 지속, 악화로 신용불량자 문제가 본격화 됨.

II. 신용불량자는 구제하되, 카드사 책임도 물어야

□ 신용불량자의 급격한 규모 확대로 신불자 구제책 불가피

○ 신불자가 2004년 한때 370만 명(경제활동인구의 18%)에 이르며 이들에 대한 공적 대응이 불가피해짐.

- 당국의 지도와 개입으로 여러 형태의 신불자 신용회복지원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단 문제의 규모가 커져 공적이 개입이 필요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는 기술적인 문제임.

- 현재 금융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개별 및 다중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고 2004년 약 97만 명을 지원하여 그중 75만 명의 신불자 해제

○ 하지만 채무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애초 채무이행에 관련된 책임에 대한 점검이 미흡

- 불이행된 채무발생 당시 카드사들이 신용능력 점검 의무(Due Diligence)를 수행했는가를 따져 무자격자에게 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판명되면 채무금액을 공적자금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카드사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개인 신용불량문제의 본격화로 인해, 큰 비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비했던 관련 제도가 정비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음.

□ 정부는 불가피한 적기시정조치는 제때 추진해야

○ 정부는 자의적인 시장개입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적기시정조치는 과감히 펼쳐야 하며, 관련 당사자들이 책임을 가려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도덕적 해이 풍조가 줄어들 수 있음.

- 문제 초기에 카드사들의 행태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개입에 대한 암묵적 기대가 병리적 영업행태(즉 공격적 현금서비스 확장)를 조장하였음.

신용카드와 신용불량자 문제의 재조명

시장경제 ISSUE PAPER-08

한국의 시장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I. 문제제기 및 결과요약

일반적으로 신용불량은 합의된 조건으로 신용공여자로부터 신용을 이용한 사용자가 상환기일 등과 같은 합의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방적 강압이나 사기에 의한 거래의 경우 거래조건 불이행은 신용불량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어서 신용불량은 기본적으로 자발적 거래의 결과이다. 신용불량문제는 신용공여가 이루어지면 필연적으로 때와 장소를 불문하여 나타나는 일이며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흔히 있던 현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2002년 이후 문제의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며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파급효과가 있었다는 일반적인 인식 때문이다.

신용불량문제가 국가경제 안정 저해요인으로 부상한 것은 신용카드와 관련된 금융시장 불안이 본격화되면서였다. 2000년 이후 남발되다시피 신용카드 발행이 늘어났다. 이는 곧 신용카드 사용급증으로 이어졌고 동반하여 급증한 카드사 발행 단기 자금조달 목적의 카드채가 신용불량의 여파로 대거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002년말부터 금융시장의 제일 큰 불안요인으로 부각된다. 그 이후 신용불량문제는 심각한 민간 소비 위축을 조장하여 2년 넘게 지속된 내수부진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아울러 사회에 막 진출하는 청년들과 상당수의 취약계층 인구가 신용불량문제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았다. 당연히 이 문제가 단순한 경제적 범주를 넘어선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정책당국은 백방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2001년부터 카드사 영업에 대한 규제강화를 시도하였으나 문제 확산을 막는 데 역부족이었다. 2002년 후반에 들어서는 카드채 관련 부실문제를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위험요인(Systemic Risk)으로 판단하여 금융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사태수습에 나선다. 정부가 신용불량문제가 악화된 데에 여러 원인(遠因)을 제공하였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2001년 수출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내수진작책의 일환으로 카드발급 및 사용에 대해 지나치게 관용적으로 대응하여 문제가 커지는 것을 방지했다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문제해결은 당면 경제현안을 푸는 것 이상의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의미도 크다 하겠다.

어찌하든 고용상황 악화 등으로 문제의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정책당국은 피동적으로 드러난 문제의 규모축소와 해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부실 카드사 정리라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은 다른 선택을 한다. 이런 선택은 당국의 더 깊은 개입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 이후 거시경제 여건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문제의 성격이나 규모 면에 있어 복잡다단하게 확산된다.

설령 문제발생 초기에 부실 카드사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일자리 및 소득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는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신용불량자 문제가 없어지는 않았을 것이다. 카드 사용자들의 신용

상환능력 상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밟더라도 이들의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과제로 남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초기 대응단계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을 확실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처리되었다면 그 이후 과정에서도 책임을 보다 엄밀히 따지는 방향으로 비용분담과 신용불량자 처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경제상황 개선, 정책적 노력 등의 결과로 2005년 들어 신용불량문제는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문제는 그 발생과정서부터 출발하여 최근 규모안정화 시기까지 여러 가지 임기응변적 대응과 시행착오를 겪었다. 문제발생 초기 정책당국의 단기간 내 조정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했는데 그 이후 경제상황 부진 지속으로 신불자 문제가 더 악화되면서 헤어내기 어려운 수렁에 빠진 형국이었다. 하지만 추가 신불자 발생 감소로 조만간 자연스러운 해결과정을 겪을 전망이다.

그동안 이 문제의 확대에 따른 각종 관련 제도 및 규범의 정비는 뜻하지 않았던 긍정적 부산물이다. 하지만 그 비용이 상당했다.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서 관행에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도 다른 모습의 신불자 문제가 재연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본 연구는 그동안 진행된 신불자 문제 중에서도 신용카드 사용급증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의 범위를 좁으나 핵심적인 분야로 국한함으로써 그동안 간과되었던 문제점과 수반되는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II. 신용불량자 문제의 배경

1. 신용카드와 신용불량자

우리나라에서 개인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분류될 수 있다. 은행대출 연체나 신용카드 대금 연체가 대표적인데 그 이외에도 전기요금 미납, 세금체납 등도 신용불량의 사유가 된다. 이런 여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신불자가 급증한 것은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이 크다. 즉 여러 가지 가능한 사유 중에서도 신용카드, 특히 신용카드 관련 대출 채무 불이행에 따른 경우가 제일 크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개인 신용불량자 추이(<표 1> 참조)에서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전체 신불자 중 신용카드 사용관련 비중이 2003년말 이후 60% 중반에서 안정되게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개인 신용불량자 증가 추이

(단위: 만 명, %)

	'00. 12	'01. 12	'02. 12	'03. 12	'04. 12
전체 신용불량자	208.4	245	263.6	372	361.5
신용카드 관련	44.4	104.2	149.4	239.7	243.5
비중	(21.3)	(42.5)	(56.7)	(64.4)	(67.3)

자료: 재경부, "신용불량자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방향", 2005.

이 외에도 2002년에 신용카드 사용자 중 신용불량 등록경험

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64%에 달하는 신불자들이 신용카드 관련 연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제진 외, 2002, p.140). 이런 결과들은 결국 근래 신용불량문제의 핵심이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용카드 신용의 공급과 수요가 늘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2. 신용카드 신용 급증: 공급자 행태

과거 생산자 중심·기업중심의 금융관행이 외환위기 이후 짧은 기간에 빠르게 변하면서 광의의 소비자 금융은 추세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신용공급자 입장에서 기업대출 수요 급락에 따른 대체 자금수요처 발굴이라는 공급증대요인과 더불어 저금리 등의 유인으로 가계들의 수요가 크게 늘면서 나타난 균형 현상이었다. 하지만 이런 균형점은 충분한 시간을 거쳐 자연스러운 조정을 겪으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환경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현상이어서 안정성 혹은 견고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비자 신용, 또는 가계신용 급증추세와 관련된 기존 검토 결과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가 중요하게 지적된다. 그 하나는 가계를 주요시장으로 보기 시작하는 금융권의 여신운용전략의 변화, 은행·카드사들의 시장점유율 확대 몰입 등과 같은 금융권 영업 행태를 강조하는 평가이다.¹⁾ 또

1) 카드사들의 영업관련 리스크 관리필요에 대한 지적은 이미 2001년부터

다른 하나는 2000년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민간소비를 유도하는 거시정책·저금리 정책 등 거시경제 정책적 결정을 중요시하는 시각이다(김제진 외, 2002; 이인실 외, 2003; 최공필 외, 2004; 홍종학, 2004; 김홍범, 2004).²⁾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작용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표 2> 신용카드 관련 주요 통계 추이

(단위: 천 명, 천 매, 십억원,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경제활동인구	21,428	22,069	22,417	22,877	22,916	23,370
카드발급수	38,993	57,881	89,330	104,807	95,571	83,456
개인이용금액	90,780	223,185	401,893	531,750	409,986	294,701
기업구매편* ¹⁾	0	1,723	41,475	91,158	70,558	63,148
카드연체율	8.1	5.2	5.8	11.3	13.6	9.02
은행대출연체율	3.7	2.5	1.3	1.5	1.8	1.7

주: * 2000년부터 도입된 제도

자료: 여신전문협회, "신용카드 업계현황", 2004년 12 월.

<표 2>에서 볼 수 있는 신용카드 급증 추세가 사후적으로 신불자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상황을 더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신용카드 사용 장려책이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다. 세원 투명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카드사용 장려책으로 카드이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공제 및 카드가맹점 세액공제(1999년), 카드영수증 복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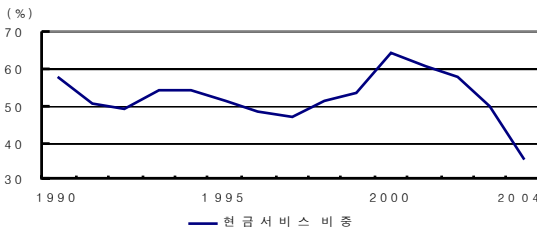
있었다(지동현, 2001).

2) 이들 중 김홍범(2004)은 신용카드 사용 유인책 제공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 부동산경기 부양 등 일련의 조치들을 재경부가 주축이 되어 1999년부터 주도한 내수부양책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제(2002년) 등이 시행된다. 이들 정책은 카드사용 촉진을 위해 간접적인 유인제공이라는 측면과 동시에 거래투명성 확보라는 순기능이 있었고 특별히 무리한 정책은 아니었다. 카드사용이 본격화된 이후 수년간에 걸쳐 세수가 정부의 예상보다 크게 늘었는데 여기에 카드사용에 따른 세원포착 증대가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보도되었다. 이런 조치들은 신용카드가 재화와 용역의 구매수단이라는 고유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진 무리 없는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후적으로 보아 문제 악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도 있었는데 이는 다름 아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대출한도를 폐지한 조치였다. 1999년 5월에 그때까지 카드당 70만원으로 유지되었던 현금서비스 한도가 폐지되었는데, 이는 그 이후 신용카드를 물품 구매 결제를 위한 단기 금융수단에서 비용이 높으나 편리한 단기 자금조달 수단으로 변형시키는 결정적 조치였다. 소위 '부대업무'라고 분류되고 있는 현금서비스 업무의 비중이 그 이전에 비해서 크게 느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림 1>에서 보듯이 현금서비스 비중은 1999년 50%대 중반에서 그 이듬해 65%에 육박하는 증가세를 보인다.

<그림 1> 신용카드 이용실적 중 현금서비스 비중



자료: 여신전문협회, '신용카드 업계현황', 2004년 12월.

특이한 것은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 조치는 앞서 살펴본 가계 신용 증가 요인들 중 내수 진작을 위한 거시경제적 고려와 특별히 관련 없이 이루어진 1, 2 금융권의 영업행태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였다는 것이다.³⁾ 1998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6.7% 감소한 실질 GDP는 1999년에는 10.9%의 강한 반등을 보였고 이런 가파른 회복추세는 이듬해까지 이어져 2000년에는 9.3%의 실질 성장을 기록하였다. 민간소비(실질)는 더 강한 반등을 보여 1999년 11%, 2000년 7.9% 증가하였다. 이를 감안하면 '99년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조치는 거시경제 상황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조치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나타난 변화가 신불자 문제 생성과 관련이 크기 때문에 다음 절에서 더 자세히 살피고자 한다.

3. 신용카드, 단기 현금 조달수단

1999년 5월부터 그때까지 70만원이었던 현금서비스 한도제한이 폐지되었는데 단일 정책조치로 보았을 때 이는 그 이후

3) 앞서 인용한 김재홍(2004)은 카드사용액 세액공제 등의 조치와 현금서비스 한도 철폐조치를 재정부의 내수진작책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단선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권장은 1999년 상반기에 실시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국민연금 통합논의로 인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 필요성이 높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도 자영업자 소득파악 제고를 위해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거부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의 경우는 1998년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금융권 관련 규제 147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금감위 관련 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이듬해 4월에 재정부가 관련법의 시행령을 고치면서 한도 철폐가 이루어졌다. 이런 배경을 살폈을 때 관련 조치들을 재정부가 주도한 일괄적인 내수진작책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다.

문제를 키우는 데 제일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론의 배경은 매우 단순하다. 한도 폐지 직후 신용카드사들은 우량고객 기준으로 현금서비스 한도를 단숨에 500만원까지 올린다. 비우량고객의 경우도 크게 상향 조정되었는데 당시 신문 기사들은 보통 정도의 신용카드 이용자의 경우 월 300백만원 정도의 현금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2001년 이후 급속히 증가한 신용불량문제에서 제일 큰 원인이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이 있었으며 신용카드 사용 중에서도 현금서비스 사용부분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실제로 천 명이 넘는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약 60%가 현금서비스 한도축소를 찬성하는 서베이 결과를 볼 수 있다(김재진 외, 2002, p.141). 현금서비스의 급증을 둘러싼 배경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조치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신용 공급자와 수요자들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을 조장한 바가 크기 때문이다. 먼저 신용 공급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1999년말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에 대한 대출금리(가중평균)가 약 8.6%였다. 이에 비해 카드사들의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각각 10~21%, 24~29%에 달했다. <표 3>에서 보듯이 카드사들의 조달금리가 10.2%로 예금은행 신규대출금리보다 높았으나 고율의 수수료율에 비하면 상당한 금리차를 보인다. 이런 큰 폭의 수익률 차이는 당연히 카드사들로 하여금 단기 판매신용 제공이라는 고유분야보다도 현금서비스 분야에 더 매진하도록 하기에 충분했다. 높은 수익률을 감안할 때 기존 카드사 입장에서는 단기간 내에 경쟁 심화가 예상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조만간 사라질,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영업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수익을 최대한으

로 올리려는 유인이 있었다.4) 즉 시장점유율 제고는 산업조직 이론에서 제시하는 복잡한 간접적 혜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 이익증대로 이어지는 것을 뜻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점유율 제고와 고객규모 확대를 위한 가두모집은 매우 당연한 결과이다.

< 표 3 > 신용카드사의 조달금리 및 수수료율 추이

(단위: 연율 %)

구 분		1998년말	1999년말	2000년말	2001년 6월말
조달금리		13.9	10.2	9.1	8.3
수수료	현금서비스	24-30	24-29	24-29	15-26 (23.34)
	할부	18-19	17-19	17-19	11-17 (13.80)
	카드론	18-22	10-21	9-19	9-19 (16.82)
	연체이율	-	-	27-29	24-29
예금은행 가중평균 신규대출금리		11.33	8.58	8.41	7.89

주: () 안은 삼성, 엘지 및 비씨카드 등 3개사의 5월말 수수료율 인하 후 1개월간 취급실적을 가중평균한 수치임.

자료: 최공필 외(2002);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호.

카드사들의 공격적인 영업의 결과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이 폭증하였다. 그 결과 신용불량 징후가 점점 뚜렷해지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재경부나 금융감독 당국의 초점이 내수진작에서 금융시장 안정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

4) 실제로 2001년까지 7개(은행계 3, 기업계 4)였던 전업카드사는 2002년에 10개(은행계 5, 기업계 4)로 증가한다.

회·금융감독원 등은 2002년 5월에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대책 중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카드사들의 현금대출 비중을 전체 채권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었다.⁵⁾ 이런 조치가 나오게 된 것은 물론 그동안 카드 현금대출이 문제라는 인식이 고조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에서 1999년 이전과 같이 일률적 한도를 정하는 것보다는 총량을 제한함으로써 카드사들이 자신들의 처지에 맞게 세부적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취한 보다 세련된 조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애초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된다. 카드사들은 정부조치의 의도대로 현금서비스 한도를 개별적으로 신용능력에 맞게 조절하기보다는 전체 채권의 규모를 늘려서 허용된 50%의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한다. 즉 카드사들은 현금대출을 줄이기보다 물품구매에 대한 무이자 할부 서비스 제공, 주유할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대금결제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응하였다. 이런 대응은 현금서비스 영업이 카드사들에 얼마나 중요하였는가를 보여 줌과 동시에 일종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적 행태의 예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현금서비스 취급비중을 줄여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신용카드 고유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낮추어 미래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행태를 보인다.

카드사들은 왜 이런 영업행태를 보였을까? 정부개입을 전제로 한 고전적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으로 판단된다.

5) 당시 정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2년 4월 현재 평균 현금서비스 한도는 2천300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5%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이는 1999년 5월, 월 70만원 한도 규제가 폐지된 지 3년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즉 자신들의 행동의 결과로 수익이 늘어나면 자신들이 그 과실을 향유하는 반면 상황이 악화되어 문제가 커지면 자신들의 책임은 자본금 손실에 그칠 것이고 나머지는 정부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런 계산은 카드사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카드사가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큰 규모의 카드채를 지속적으로 매입한 투신사 등과 같은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002년초부터 카드사들의 연체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카드채의 신규매입과 만기연장(Roll-over)을 지속했던 것은 카드사들이 잘못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해를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고 보아야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은 카드채 기대수익률이 0이거나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배제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한 가지 시나리오는 카드채 보유에 따른 이자수익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일부 카드사의 카드채가 부실화되어도 전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근거가 된다. 하지만 이런 계산은 모든 카드채가 부실화되는 가능성을 배제했을 때 가능하다. 즉 카드채 문제가 커지면 정부가 이를 방치하지 하지 않고 개입할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2003년 정부는 이런 기대를 충족시켜 준다.⁶⁾

6) 당시 카드사들의 채권 발행 증가 추세가 뚜렷했는데 이런 추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을 정도였다. 한국은행의 한 자료는 카드채, 매출채권을 바탕으로 한 ABS채권 등의 발행 증가가 “우량채권의 안정적 공급으로 채권시장의 견실한 발전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행 보도자료 2001년 1월 28일).

Ⅲ. 소비지출 증대, 카드대출 급증과 신용불량자 문제

1. 카드 채무와 소비지출 추이

민간소비가 1999년 이후 3년간 빠르게 증가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신용카드를 포함한 가계신용의 증가는 소비 증가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1년 미국의 불경기 진입과 세계경제 둔화의 여파로 수출이 크게 둔화되면서 내수진작을 도모한 정부정책이 가계신용 증대에 중요하게 기여했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신용불량문제의 주요 원인인 신용카드 사용 증대가 소비 증대에 과연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먼저 1999년 이후 소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살펴보고 그 특징과 신용카드 사용 급증을 연관지어 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999년 이후 실질 민간소비는 1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가계들의 국내 명목 소비지출은 1999년 268조2천억원에서 2002년 348조5천억원으로 1.3배 증가했다(<표 4> 참조). 이 기간 동안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비기업부문 신용카드 이용실적 추이를 보면 1999년 사용액이 90조8천억원이었는데 2002년에는 532조원으로 약 6배나 늘

었다. 두 액수간의 비율을 보면 1999년 민간 가계소비지출이 신용카드 사용액의 약 3배에 달했으나 그 비율이 2001년에 역전되면서 2002년에는 0.65로 낮아진다. 단적으로 말해서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가 소비 증가를 설명할 수 있으나 그 반대로 소비 증가가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목적으로 신용카드 대출이 쓰였는가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표 4> 가계의 형태별 최종소비지출

항목별	단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내구재	증감률	-35.0	56.0	25.3	5.2	7.9	-15.3	-9.4
	비중	6.2	8.4	9.3	9.0	8.8	7.3	6.4
준내구재	증감률	-24.0	15.6	14.7	4.7	15.2	-3.2	-2.7
	비중	6.8	6.8	7.0	6.6	6.9	6.6	6.3
비내구재	증감률	0.6	15.4	10.2	6.9	6.2	2.3	4.9
	비중	30.7	31.0	30.3	29.5	28.5	28.5	29.2
서비스	증감률	-1.4	9.2	12.1	12.7	11.8	5.2	3.6
	비중	56.3	53.8	53.4	54.9	55.8	57.6	58.1
국내소비지출	증감률	-5.7	14.4	12.8	9.7	10.0	2.0	2.6

주: 어두운 부분은 해당 항목 증감률이 그해 전체 소비 증감률을 상회하는 경우임.

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호(1995년 기준 명목).

우선 가계부문의 부채와 소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 기 위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핀 연구결과(박주영, 2004)를 보자. 박주영에 의하면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득이 부채보다 더 중요한 소비 결정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순환표상의 광의의 개인부문 부채의 증가는 유동성제약을 경험하는 가계의 소비기회를 높여 주는 것으로 이해

되고 있다.

<표 5>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항목별	단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증감률	02	16.2	7.8	4.6	5.7	2.1	6.5
	비중	17.0	17.2	16.5	15.7	15.1	15.1	15.7
주류 및 담배	증감률	-2.7	15.6	7.8	9.9	6.7	5.1	2.8
	비중	2.5	2.5	2.4	2.4	2.4	2.4	2.4
의류 및 신발	증감률	-22.9	13.5	16.8	5.2	16.7	-3.3	0.4
	비중	4.4	4.4	4.5	4.3	4.6	4.4	4.3
임료 및 수도광열	증감률	4.1	5.2	13.8	6.9	5.2	6.6	4.7
	비중	18.7	17.2	17.3	16.9	16.2	16.9	17.2
가계시설 및 운영	증감률	-21.6	18.1	13.9	7.0	9.9	-3.8	-2.8
	비중	4.4	4.5	4.6	4.5	4.4	4.2	4.0
의료 보건	증감률	-11.6	9.9	5.0	16.0	18.8	7.1	7.2
	비중	4.2	4.1	3.8	4.0	4.3	4.5	4.7
교통	증감률	-11.8	15.5	12.3	9.3	7.2	-1.3	0.4
	비중	11.9	12.0	11.9	11.9	11.6	11.2	11.0
통신	증감률	18.6	37.1	29.2	13.7	9.2	-3.1	3.0
	비중	4.2	5.0	5.7	5.9	5.9	5.6	5.6
오락문화	증감률	-16.2	17.3	23.6	9.6	14.9	-2.8	-3.2
	비중	6.9	7.1	7.8	7.8	8.1	7.8	7.3
교육	증감률	-3.5	6.0	7.3	14.3	9.7	10.5	6.0
	비중	5.9	5.5	5.2	5.4	5.4	5.9	6.0
음식 숙박	증감률	-9.4	26.1	11.1	10.0	10.6	4.6	1.7
	비중	6.8	7.5	7.4	7.5	7.5	7.7	7.6
기타	증감률	-3.7	13.5	11.3	17.1	16.3	1.1	0.8
	비중	13.1	13.0	12.8	13.7	14.5	14.4	14.1
국내소비지출	증감률	-5.7	14.4	12.8	9.7	10.0	2.0	2.6

하지만 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계층에 따라 이런 효과

가 다르다. 근래 고소득층의 경우 부채의 증가는 소비와 부정적인 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부채 증가가 부동산 매입과 관련이 커서 소비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반면 중·저소득층의 경우는 부채의 증가가 소비, 특히 내구재 소비의 증대와 관련이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1999년과 2000년의 경우 소비 증가 행태를 보면 앞서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내구재 및 준내구재 소비 증가가 두드러진다. 하지만 그 이후 이 범주의 소비는 전체 평균 증가율보다 더딘 속도로 늘었다. 이에 비해 서비스 부문 소비 증대가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다. 즉 2002년 이후 서비스분야 소비증가율은 전체 소비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했다. 1999년과 2003년 사이 전체 소비지출액 증가분 약 80조 중 약 50조가 서비스 부문 지출 증대였다. 이런 양상은 2000년 이후 일종의 서비스 분야의 붐(Boom)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비슷한 추세를 <표 5>의 목적별 최종지출항목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3년 이상 그해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인 항목 중에는 의료 보건, 통신, 오락문화, 음식 숙박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모두 서비스 분야에 속하는 것들이다.

다시 소비지출 총액으로 돌아와서 보면 신용카드 신용은 이 기간에 가계에 공여된 신용의 일부분이다. 기간중 은행권의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포함)이 크게 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가계에 공여된 전체 신용규모는 실제 소비지출액을 크게 상회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신용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을까?

2. 목적별 가계신용 종류

신용불량을 유발한 신용사용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분리할 수 있다. 먼저 소비지출에 따른 경우와, 다음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이다. 각종 언론 보도나 사회적 관심은 소비지출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신용불량문제에 집중되어 온 감이 있다. 특히 2001년경부터 카드빚 관련 범죄·자살 등이 자주 발생하면서 청년 실업문제와 어우러져 무분별한 청년층들의 신용카드 남용, 그리고 신용불량자로의 전락 등이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몇몇 통계만 살펴봐도 청년층의 신용카드 남용문제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신용불량문제의 성격을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대부분의 카드보유자들에게 제공되었던 현금서비스는 지불이자가 매우 높으나 자금수요자에게는 자금의 용도나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도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급전조달 창구가 된다. 소비지출을 위한 것은 물론 제도권 신용조달이 용이치 않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되었을 것이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실적을 비교해 보면 1999년 이후 현금서비스 사용액이 판매신용을 넘어섰으며 그 이후 두 가지 금액 모두 크게 증가하는데 그 속도도 전자의 경우에 훨씬 빠르게 나타난다. 이런 추세를 소규모 사업자 자금조달과 연관지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는 1999년 이후 일반은행들의 대출이 꾸준히 늘었음에 반하여 소규모 사업자들의 중요한 자금조달 창구인 서민금융기관들의 대출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

을 중기적 추세라고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 서민금융기관들의 대출규모가 2003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신용카드관련 신용공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999년 이후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병렬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i) 외환위기 직후 크게 나타난 자영업 창업 붐, (ii) 서민금융기관들의 대출 하락세, 그리고 (iii) 신용불량자들의 몇 가지 특징이다. 이하에서 이 사항들을 차례로 살펴보자.

3. 사업 목적의 카드신용 사용

(1) 자영업 창업 붐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자 창업이 크게 늘었다. 구체적으로 반기별 전체 및 자영업 분야 고용추세를 보여 주는 <표 6>은 이를 확인해 준다. 여기에서 고용주는 임금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를 지칭한다. 1999년말부터 2002년 상반기 사이의 고용주수는 140만 명에서 163만 명으로 약 23만 명이 늘었는데 증가폭이 8%가 넘는 반기가 많았다. 이에 비해 전체 취업자수 증가율은 2%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표에 있는 자영업주는 고용주에 덧붙여 개인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를 더한 숫자인데 이는 고용주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영업주수는 1999년말 571만 명에서 2002년 6월에는 630만 명으로 약 60만 명이나 증가했다. 하지

만 그 이후 2003년말까지 1년 반 사이에는 599만 명으로 약 30만 명이 줄어든다. 임금근로자나 전체 취업자 추세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동태적 추세는 가계신용, 특히 신용카드 관련 신용의 대체적인 증가세 등락과 일치한다.

<표 6> 종사지위별 취업자 추이

시점	계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주*	고용주*	임금근로자
1999.06	20,599 (2.10)	7,844 (-0.86)	5,779 (1.39)	1,324 (-4.47)	12,755 (4.01)
1999.12	20,673 (5.48)	7,478 (2.17)	5,709 (2.07)	1,400 (2.26)	13,195 (7.45)
2000.06	21,475 (4.25)	8,002 (2.01)	5,930 (2.61)	1,440 (8.76)	13,473 (5.63)
2000.12	21,042 (1.78)	7,494 (0.21)	5,786 (1.35)	1,525 (8.93)	13,548 (2.68)
2001.06	21,934 (2.14)	8,096 (1.17)	6,115 (3.12)	1,564 (8.61)	13,838 (2.71)
2001.12	21,628 (2.78)	7,632 (1.84)	5,981 (3.37)	1,600 (4.92)	13,996 (3.31)
2002.06	22,515 (2.65)	8,206 (1.36)	6,300 (3.03)	1,630 (4.22)	14,308 (3.40)
2002.12	22,052 (1.96)	7,646 (0.18)	6,013 (0.54)	1,582 (-1.13)	14,405 (2.92)
2003.06	22,383 (-0.58)	7,859 (-4.23)	6,071 (-3.63)	1,611 (-1.14)	14,524 (1.51)
2003.12	22,096 (0.20)	7,472 (-2.27)	5,987 (-0.42)	1,677 (6.01)	14,623 (1.52)
2004.06	22,822 (1.96)	7,764 (-1.21)	6,139 (1.13)	1,679 (4.23)	15,058 (3.67)
2004.12	22,494 (1.80)	7,385 (-1.16)	6,016 (0.49)	1,665 (0.71)	15,109 (3.32)

주: *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주 + 무급가족종사자,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감률

자영업주 = 고용주 + 자영자

고용주: 유급종업원을 1인 이상 고용하는 자영업주

자영자: 혼자 혹은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이 영업하는 자영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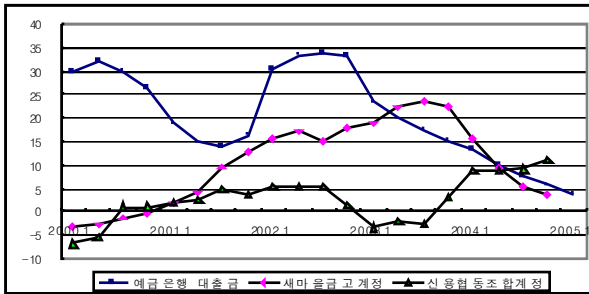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 서민금융기관 대출 추이

통상 소규모 창업을 위한 창업자금 조달을 위해서 은행보다는 새마을 금고나 신협과 같은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앞서 본 것과 같은 활발한 자영업 창업이 진행되었던 시기에 서민금융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대출이 증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2000~2001년 기간 동안 非은행 서민금융기관의 대출은 은행의 대출 증가에 비해 매우 더딘 속도로 늘었던 것을 <그림 2>에서 볼 수 있다.

<그림 2> 각종 대출금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호

이런 추세가 카드관련 대출과 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근거는 단지 신용카드 관련 대출의 증가와 서민금융기관 대출감소 시기의 일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02년 7월부터 카드사 등에 대해 현금대출 비중을 전체 채권의 50%로 제약하는 등 감독당국의 현금서비스 업무에 대한 제약이 본격화되면서 이들 서민금융기관의 대출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⁷⁾⁸⁾ 이

7) 각주 4)에서 인용되었던 한국은행 자료는 신용카드업 급신장이 가계대출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저축기관 및 보험기관 영업기반(을) 잠식”했다고 평가하고 있다(한국은행 2001. 1. 28).

8) 비슷한 관측은 이인실, 배상근·김창배(2003)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신전문기관(카드사와 할부금융사, 저자 주)을 중심으로 정부의 가계대출억제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2002년, 저자 주) 하반기에 들어서는 상

런 일련의 추세는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와 서민금융기관의 대출은 상호 대체재적인 성격이 크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하겠다.

이 기간 동안 전년 동기에 비해 은행대출이 13%에서 32%까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기관의 대출 증가세는 5%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3) 신용불량자들의 특징

<표 7>은 2004년 12월말 현재의 신용불량자들의 연체금액 및 연령, 등록기관수 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32%)와 40대(31%)가 대부분이며, 금액은 500~3,000만원(41%)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채무금액이 낮을수록 신불자 연령도 낮은 편이다.

<표 7> 신용불량자 금액 및 연령 분포

(단위: 천 명)

	연령별					등록금융기관수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 이상	1개	2-5개	6개 이상	
500만원 미만	333.1	325.5	286.8	121.3	81.9	79.72	352.9	0.312	1,150.5
500~1,000만원 미만	100.3	162.2	152.2	62.0	35.8	18.45	321.2	7.2	512.9
1,000~3,000만원 미만	135.1	335.7	319.5	126.8	67.7	19.06	633.0	16.14	985.2
3,000~5,000만원 미만	42.2	152.6	148.2	57.7	26.1	37.3	195.9	19.37	426.9
5,000~1억원 미만	24.1	123.6	133.6	52.9	22.1	27.9	106.9	22.15	356.4
1억원 이상	4.3	39.7	77.9	41.8	19.2	25.7	75.7	8.17	183.2
합계(명)	639.4	1,139.6	1,118.4	462.7	253.1	126.35	1,685.7	66.60	3,615.3

자료: 제경부, "신용불량자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방향", 2005.

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등 저축기관과 보험사 등의 대출이 크게 늘어났음."

채무금액 5,000만원까지는 30대 비중이 제일 크지만 그 이상에서는 40대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 채무금액이 3,000만원을 넘어서면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등록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진다.

신불자 채무 규모 및 연령 분포를 보면 일부에서 언급되듯이 젊은 계층의 무분별한 소비로 인한 채무 증가가 중요한 이유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⁹⁾ 오히려 사회생활 경험이 많은 30~40대 계층이 제일 많기 때문이다. 최근에 이루어진 한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주의 연령이 30~40대인 경우가 전체의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아울러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이루어진 동 조사에 따르면 매년 50만 개 점포가 창업하고 40만 개가 폐업하는 다산다사형 구조인데 특히 2003년에는 창업대비 폐업비율이 약 88%로 급증하였다.¹¹⁾ 따라서 30~40대 신불자의 경우 사업 관련 필요에 의해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규모의 채무를 발생시킨 것이 더 보편적인 경우로 보인다.

<표 8>은 2004년 2월에 4,000명에 가까운 신불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를 보여 주는데 이에 따르면 자영업들의 신용불량 실태가 더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신불자들의 등록시점 직업분포를 보면 전체의 43%가 자영업자였으며 차하위 그룹인 정규직의 31%보다도 훨씬 비중이 높았다. 정규

9) 동 자료에 따르면 10대 신불자가 약 2천 명 정도이며 대부분(약 3/4)이 500만원 미만의 채무를 지고 있다.

10) 2005년 3월에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1,600개 점포를 대상으로 행한 자영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11) 중소기업특별위원회, 2005년 5월.

직을 가진 신불자의 상대적 비중은 등록 당시나 2004년 2월 현재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자영업의 경우는 큰 폭으로 감소했고 동시에 임시직과 무직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약 반 정도의 경우에서 자영업자들은 신불자 등록과 함께 그때 까지 가지고 있던 주요 생활의 터전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새로운 취업기회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폐업으로 실직하거나 소득이 크게 낮아지는 가계가 속출하였을 것이고 그에 따른 사회적 충격이 컸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8> 신용불량자 실태(평균 부채, 소득 및 직업)

	등록 시 점	'04년 2월 현재
총부채(평균)	4,372만원	4,094만원
월소득(평균)	198만원	113만원
총부채/연소득	1.72배	3.22배
직업	자영업 43%	자영업 21%
	정규직 31%	정규직 29%
	임시직 13%	임시직 27%
	주부 6%	주부 7%
	학생 3%	학생 1%
	무직 4%	무직 15%

자료: 재경부, "신용불량자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방향", 2005.

(4) 자영업 금융제공 역할

여기에서는 어떻게 자영업자 등과 같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가상적으로 피자가게를 운영하는 필자가 천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일반적으로 두 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는 거

래하는 은행에 가서 천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수단은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두 장을 바탕으로 각 오백만원씩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피자가게에서 늘어나는 배달주문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배달용 오토바이, 인건비, 보험 등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런 자금 사용은 객관적으로 합당하고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을 이용할 것이다. 우선 금융비용이 낮을뿐더러 거래 은행에 필자가 영위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있음을 알려 신용을 보장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용을 아끼기 위해 배달용 오토바이들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여 합의처리를 위해 천만원의 비용이 급히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자. 이런 경우 거래은행에 가서 대출을 요구하기도 어려우며 기다릴 시간도 없게 된다.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카드 두 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을 것이다. 금융비용이 높은 것을 알지만 다른 마땅한 조달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이 불가피해진다. 이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적절한 현금서비스 사용의 예이다. 운영하던 피자가게의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각종 채무에 시달리는 지경이 되었을 때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급한 채무부터 지불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현금서비스가 아마도 유일한 신용조달 수단이 된다.

즉 신용수요자의 입장에서 카드에 바탕을 둔 현금서비스와 카드로는 필요자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정상적인 신용조달이나 접근이 어려운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신용여건이 나빠질수록 이를 더 선호하게 되는 역선택적 성격이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거

래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자금에 대해 신용카드사에서는 일종의 ‘묻지마’ 대출을 사전적으로 승인해 주는 것이다.

IV. 신용카드 관련 정부대책의 문제점

1. 소비자 신용관련 문제 악화와 정부의 대응

(1) 미흡한 신용카드 사용 억제정책

카드관련 대출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문제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에서는 이미 2001년말부터 2002년 중순까지 각종 대응책을 마련하고 발표·시행했다. 대응책은 무자격자 카드발급 위규회사에 대한 엄중 제재 등 신용카드 남발 방지를 위한 조치, 카드사들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손 충당금 적립비용의 상향 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제시되었다(세부사항은 <표 10> 참조). 이런 신용카드 사용억제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조치들은 2003년 들어 그 이전에 우려되었던 신용카드 사용자 및 카드사들의 문제가 현재 화되었음을 보여 주는 조치들로 바뀐다. 2003년 1월에 처음으로 ‘신용불량자’ 대책이 등장하고 그해 6월 이후에는 카드사 부실화 방지를 위한 ‘건전성’에 초점을 둔 대책들이 제시된다. 결국 그 이전 2002년에 집중된 ‘억제책’들이 문제발생을 예방하는 데 미흡했음을 보여 주는 증거라 하겠다.

새로 통합 정비된 금융감독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커졌고 급기야 신용카드 거품이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당시 감독체계에 대해 실망스러

운 평가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한 가지 가능성은 감독당국의 시의적절한 문제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감독당국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시정하러 하였으나 상위 정책당국이 여론이나 정치적인 고려를 보다 중시하는 판단으로 감독 실무자들의 노력을 무산시켰을 수 있다. 사후적으로 보면 감독당국이 문제 확산가능성을 인지하고 대응하려 했던 흔적이 보이거나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기에는 미진했다. 두 가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대응정책의 초점이 분산되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이 커 보인다. 둘째,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취해진 조치들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하겠다.

첫 번째 문제점을 잘 보여 주는 예가 2002년 5월에 발표된 '신용카드 종합대책'이다. 내용을 보면 카드사들의 부당 모집행위 금지, 현금대출 위주 영업행태 개선 등의 필요한 내용과 함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큰 역점을 기울인다. 이는 당시 벌써 나타나기 시작한 신불자 증가추세보다도 카드사들이 고율의 수수료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는 것을 더 시급한 문제로 보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간단히 말해서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카드대출 체납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서비스가 과다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조치는 카드관련 대출 부실을 낮추기 위해서 미흡했다. 하지만 대책은 이런 문제의 핵에 집중하기보다는 카드사들의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정서적 판단에 바탕을 둔 여론에 휘둘려 집요하게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데 주력한다. 카드사의 수수료가 과연 적정수준인가의 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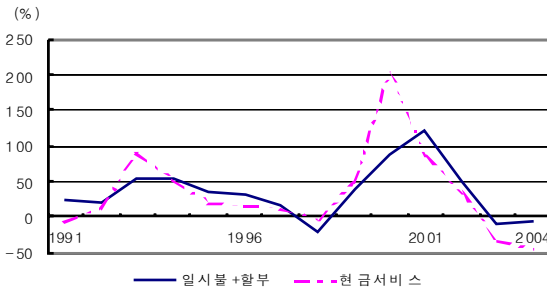
의를 떠나서 카드이용, 특히 현금서비스 이용은 자발적인 상거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부가 쉽게 관여할 일이 아니다. 불필요한 부분에 규제자원을 집중하면서 실제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칭적으로 등한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 살피기로 하자. 당시 대책이 현금서비스를 전체 채권액의 50%로 제한한 것을 보면 이 부대업무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현금서비스 비중이 60%를 넘어 그 이전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그림 1>에서 보았듯이 신용카드 부대업무의 비중이 높은 것은 199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의 일반적인 추세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금서비스 비중이 높다든 것만이 유일한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절대적 규모의 엄청난 증가속도와 이에 수반되었던 사용자 신용도의 저하였다. 특히 현금서비스의 경우 2000년 하반기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 200%나 되는 폭발적 증가를 보였다. 당시 평균 현금서비스 한도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2.7백만원)의 85%인 점을 감안하거나, 신용도보다는 이용실적을 바탕으로 한도를 책정하는 관행을 감안하면 보다 더 적극적인 억제책이 강구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즉 현금서비스 총액에 대한 간접적 유도책(전체 채권 대비 50% 한정)보다는 각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총액 동결이나 카드별, 또는 개인별 현금서비스 한도 재설정이 더 바람직한 조치였을 것이다. 이런 조치로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순차적으로 이용하는 소위 ‘돌려 막기’ 등으로 신용불량을 면하던 사용자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총액의 폭발적

증가추세에 제동을 걸 수 있었던 조치이다.

<그림 3> 신용카드 이용실적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여신전문협회, '신용카드 업계현황', 2004년 12월.

이런 조치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이 2002년 상반기경에는 실시되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해말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정책당국자들이 이런 강경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었을 것인가 의문이 든다. 특히 엄청난 카드 사용자수를 감안하였을 때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상당수 사용자들이 여론을 악화시킬 것이 예상되는데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김재홍(2004)의 논점은 전술한 논의와 개연성이 크다. 김재홍은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기간을 3 구간으로 나누어 각 기간의 재정부 정책기조를 내수진작기(1998~2001년말), 내수진작 정책추진과 부작용 인식기(2002년 상반기), 그리고 내수진작 정책기조의 포기과 부작용에 대한 본격 대응기(2002년 하반기~2003년 상반기) 등으로 규정한다. 관련된 정책들을 결정함에 있어 금감원이나 한은보다 '수직적 기관 위계'상 상위에 입지한 재

정부의 이런 시각이 당시 진행된 정책들의 기본 방향을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¹²⁾ 이런 분석이 사실이라면 본격 대응기에 취해졌던 조치들이 미흡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거시경제 상황 악화와 신불자 문제와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2001년 수출둔화 이후 거시경제상황 악화를 신불자 문제 확대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다. 물론 일자리 창출 부진 등으로 소득창출이 어려워지면서 신불자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거시경제 상황 악화만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 고용, 소비, 생산과 같은 거시경제 상황이 신불자 생성의 제일 중요한 원인이라고 한다면 1997~1998년 우리가 겪은 외환위기 이상의 거시경제 악화의 예가 없다. 엄청난 거시경제 충격을 겪었음에도 신용불량자 급증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 후유증이 아니었다. 당시에 신용불량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던 것은 당시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그 이전에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친 신용도 높은 집단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용불량문제의 악화에는 거시경제 충격정도보다는 오히려 신용사용자 규모 및 사용자 신용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 카드사 유동성 위기와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

2001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카드 부채 증가 억제책을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카드사들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표 9> 참

12) “신용카드회사와 가계부실화 문제와 그로 말미암은 최근의 시장불안은 지난 수년 동안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들 사이에 협력·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기인한다. 한마디로 감독실패(Supervisory Failure) 탓이라는 뜻이다.” 김홍범(2004, p.14)

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연체율, 현금서비스 제약조치, 카드 남발 저지 등으로 카드사 손익상황이 급격히 악화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카드채를 통한 자금조달과 만기연장이 어려워지는 상태로 이어진다. 특히 상태가 어려운 카드사들의 경우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면서 정부는 카드사 및 카드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카드사 종합 대책’(2003년 3월 17일)과 ‘금융시장 안정대책’(동년 4월 3일)을 발표하였다. 전자는 카드사의 자기자본 확충 유도, 부대업무비율(현금대출 50%) 제한 준수시한 연장, 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한 카드사의 부실채권 매입 및 연체자에 대한 대환대출기간 장기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와 많은 카드채를 보유하고 있던 투신권의 유동성위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4월 3일 발표된 후속 대책에서는 카드사 자기자본 확충규모 확대, 카드채 만기연장 및 카드채펀드 설정 등의 대책을 내 놓았다(이명환, 2003년 4월).

<표 9>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 주요내용

	가계대출 억제정책	내 용
2001년 12월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드발급 시 본인 및 소득 여부 등 확인 의무화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 시 부모의 사전동의 등 의무화
2002년 2월	카드사 가두모집 금지 및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적 가두 회원모집행위 금지 •카드모집인을 여전협회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가계대출 관련 대책(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 조정 : 은행 정상여신(0.5%→0.75%), 요구의여신(2.0%→8.0%) •가계대출 확대은행에 한은 총액 한도대출 배정 축소

<표 9> 계속

	가계대출 억제정책	내용
2002년 3월	부자격자 카드발급 위규 회사에 대한 엄중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02. 2-3월중 3개 카드회사의 신규카드 발급업무를 정지
2002년 4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억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별 총액한도대출 배정 시 가계대출 비중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총액한도대출상의 제재 강화: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시 총액한도대출차감비율을 미달액의 50%에서 75%로 상향 조정 은행권급 총액한도대출 대상자금 순증액 50%를 배정하는 순증액 기준 총액한도대출을 확대: 순증액 기준 배정한도를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계대출금과 신용카드 채권의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비율을 차등화하여 상향 조정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분류 강화 지도
2002년 5월	신용카드 종합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드 수수료 인하 유도, 부당 회원모집행위 금지, 휴면카드의 갱신 및 대체발급 제한, 카드회원 결제능력에 따른 이용한도 책정 등 신용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을 전체 채권의 50% 이내로 제한
2002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비율 70-80% → 60% 이내로 하향 조정
2002년 10월	주택담보비율 하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담보비율을 주택가격의 60%로 하향 조정
2002년 11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담보대출의 개인신용평가를 의무화하고 BIS위험가중치 상향 조정(50% → 60, 70%) - 30일 이상 연체 또는 과거 1년간 누적연체일수 30일 이상: 60% 적용 - (자주대출금*총액/차주 연소득)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 70% 적용
2002년 12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계열사에 대한 신용카드 신용공여액을 여신액에 포함(유예기간 1년, 시행일 03.1월말)
2003년 1월	가계대출 및 신용불량자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카드사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강화, 경영개선노력을 유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및 부실채권 조기 상각 유도
2003년 6월	신용카드사 관련 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카드사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유동화자산 일정부분 포함 신용카드사 연체율 산정의 객관성을 제고
2003년 10월	신용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합리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기시정조치 연체율 기준,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

자료: 최광필 외(2004)

이런 당시 조치들이 빠르게 악화되어 가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시장안정책에 대해서 비판적 지적이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이런 조치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카드사들의 강력한 자구노력이 필요했는데 4월 3일 대책은 ‘시장여건을 보아가며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혀 카드사들이 자구노력을 게을리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당시 투신사들이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과도한 카드채와 CP를 편입하였을 뿐 아니라 일부의 경우는 규정을 위반하면서 장외파생상품인 옵션 CP를 펀드에 편입, 이면계약을 통하여 장기간 매입약정까지 맺고 있었다. 이런 행태를 보인 투신사의 환매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증권, 보험 등 기관 투자가가 카드채를 매입 또는 만기연장해 주도록 한 조치는 시장경제체하에서 요구되는 책임분담의 우선순위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이장영, 2003). 이상과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규제적 관용을 베풀고 카드사 및 투신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조치를 종료시키지 않음으로 해서 매우 상태가 좋지 않은 카드사까지도 존속시킨다. 이로 인해 재무건전성에 따라 차별대우를 받도록 하는 시장규율이 흐트러지도록 조장한다. 당시 부실 카드사 및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은 본 연구의 주안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논의를 줄인다.¹³⁾

13)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논의는 한국개발연구원 국내경제이슈(2003년 7월), 김홍범(2004) 참조.

2. 신불자 지원대책

이런 금융시장의 불안고조와 정부의 임기응변적 대응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카드 사용자들의 연체는 갈수록 커져 갔다.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상황이 2003년 들어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취업자수가 전년에 비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열악한 고용추세는 당연히 신규 소득 증가세에 반영되었고 한계소득자들의 소득 불안정성을 악화시켰다. 이는 자연스럽게 채무 불이행의 빈도를 높이게 된다. 기본적으로 신용 공여와 신용조건 불이행은 거래당사자들의 사적 조정 영역에 속하나 부실이 급하게 늘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카드사들로서는 이에 적절히 대처할 체계적 대응체제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당연히 사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가 정부가 관여해야 되는 문제로 비약한다.

2002년 들어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신불자가 빠르게 늘면서 이들의 채무조정을 통하여 전체 문제규모를 통제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었다. 그해 11월에 첫 번째 시도로 ‘개인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공동협약(개인워크아웃제도)’이 발효된다.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과중채무자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한편, 과중채무자 발생을 예방하여 신용사회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출범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초기에는 사용자가 많지 않았으나 점차 신청자가 늘었다.

이 외에도 법적효력이 사적 조정의 범주에 속하는 개별금융

기관 신용회복 지원, 한마음금융이 운영하는 배드 뱅크(Bad Bank)와 법원이 운영하여 법적 면책이 가능한 개인회생 및 개인과산제도에 대한 중요 사항들을 <표 10>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표에는 빠진 중요한 다중 신용불량자들 지원제도로써 LG-산은 다중채무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면서 2004년중에 약 97만 명을 지원했고 그중 75만 명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었다.

<표 10>에서 나열된 방안에 덧붙여 최근(2005년 3월) 既시행 중인 구제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청년층, 영세자영업자 중 신불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영세자영업자 중 신불자는 각각 약 15만 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제 방식으로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대상자가 자산관리공사(KAMCO)에 채무재조정을 신청하면 KAMCO가 신청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매입하는 방식이 있으며, 청년층 신불자의 경우는 대상요건에 해당되는 지원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창구로 '청년층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맺고 심사 후 채무재조정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 분야로 영세자영업자의 경우도 역시 신용회복위원회에 '영세 자영업자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맺고 위원회가 대상자의 접수를 받은 후 채무재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2005년 10월 재정부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4월 1일~9월 22일 사이에 채무재조정을 신청한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기초 수급자 약 64천 명, 청년층 13천 명, 그리고 영세자영업자 12천 명 등 총 89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에 제공되는 혜택은 기초수급자로 있는 동안 원금상환 유예, 벗어난 경우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무이자 분할상환 하

도록 되어 있으며 연체 및 향후 이자를 면제해 준다.

<표 10> 신용불량자 구제제도 비교

구 분	금융감독기구 시행			법원 시행	
	개별금융기관 신용회복지원	Bad Bank (한마음금융)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각 금융기관	자산관리공사 등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시행시기	2003년 3월중	2004년 5월 20일부터 한시적	2002년 10월 1일	2004년 9월 23일	1962년 1월 20일
대상 채권자	1개 금융기관	협약가입 2개 이상 금융기관	협약가입 2개 이상 금융기관	제한 없음 (사채 포함)	제한 없음 (사채 포함)
채무범위	금융기관에 따 라 다르나 원 칙적으로 1개 월 이상 연체 된 채무	협약기관에 1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	모든 협약가입 금 융기관의 담보 및 무담보 채무	금융기관 채무뿐 만 아니라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	금융기관 채무 뿐만 아니라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
대상 채무자	신용불량자로 서 채무액이 1,000만원 미만 인 자	2004년 3월 10 일 현재 신용 불량자로서 채 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자	최저생계비를 초 과하는 수입이 있 는 경우로서 총채 무액이 3억원 이 하인 신용불량자	파산위기에 처한 개인채무자 중 계 속적, 반복적 수 입이 있는 급여소 득자 또는 영업소 득자로서 무담보 5억원 담보부 10 억원 이하의 채무 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원인이 있 는 채무자 (금액 제한 없음)
채무조정 수준	금융기관별 자체기준	변제기간 8년 이내 원칙적 으로 원금 감 면은 불가능	변제기간 8년 이내 원칙적 으로 원금 감면 불가능	변제기간 8년 이 내 청산 시보다 변제액이 많을 것 원금 감면 가능	청산 후 면책 원금 감면 가능
법적효력	사적 조정	사적 조정	사적 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 시 법 적 면책	면책불허가사 유 없는 경우 법적 면책
신용불량 해제여부	-	대부승인 결정 시 해제	신용회복지원 확정 시 해제	변제계획 인가 시 해제	면책결정 시 해제

<표 10> 계속

구 분	금융감독기구 시행			법원 시행	
	개별금융기관 신용회복지원	Bad Bank (한마음금융)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아·신속하고 비용이 낮음 -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하므로 홍보 및 절차안 내가 잘 이루어짐 -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소비자신용 상담 및 소비자 교육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대상 요건이 완화됨(채무액 범위가 넓고, 사채도 포함). 청산 시보다 변제액이 많지만 하면 원금 감면도 가능 - 법적으로 면책되므로 강력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대상자의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신청 가능한 채무금액이 제한적임 - 채무조정에서 원금 감면은 어렵고 분할상환·이자감면이 주요 대상이라 대상자가 한정됨 - "법적 효력"이 없는 사적 조정이라서 한계가 있고, 금융기관 외의 사채 등에 대하여는 조정이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신고"의 불이익, 면책불허가사유 해당여부가 불투명 	

자료: 한국산업은행 경제이슈, "신용불량자 구제제도", 2004.

청년층의 경우 최장 2년 동안 원금상환유예하고 상환능력 확보 시 최장 8년 분할상환토록 했으며 연체 및 향후 이자도 원금을 약정기간 내 상환하면 면제되도록 하고 있다. 영세자 영업자의 경우 최장 1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유예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토록 했으며 약정기간 내 원금을 상환하면 연체 및 향후 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이루어진 전 기한 각종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최근까지의 채무재조정 실적은 다음의 <표 11>에서 볼 수 있다.

이런 구제책에 덧붙여 정부는 그동안 신불자들이 취업 시에 불이익을 받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애로가 많다고 판단하여 공식적으로 '신용불량자' 개념을 삭제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2005년 4월 신용정보법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아울러 고용목적으로 고용주가 본인의 사전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피고

용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못하도록 했다.

<표 11>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의 실적

(단위: 명)

민간 프로그램						
	2003년	2004년	2005년 1~8월			
개별금융기관 지원	-	208,868	71,179			
개인워크아웃	26,198	263,302	183,356			
LG-산은 공동추심	36,357	125,188	56,011			
합 계	62,555	597,358	309,515			

법원 프로그램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1~7월
개인회생신청	-	-	-	-	9,070	25,459
개인파산신청	329	672	1,335	3,856	12,317	16,978
합 계	329	672	1,335	3,856	21,387	42,437

자료: 재경부, "생계형 금융채무 대책 추진현황", 2005년 국감자료, 2005년 10월.

V. 신용불량자 관련 정책의 문제점

1. 초기 단계 대응의 문제점

시장경제에서 자발적 신용공여와 사용은 매우 흔히 존재하는 거래 행위이다.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면 거래당사자들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 및 구제는 계약과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해결되어야 한다. 금번 신불자 문제는 두 가지 이유로 이런 원칙이 적용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첫째는 그 규모이다. 전체 신불자수가 2004년 한때 37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6%에 육박하여 가히 범국민적 문제로 비화하였다. 문제를 키우는 데 관련한 금융기관, 특히 전체 신불자의 7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카드사들이 이렇게 많은 수의 관련 당사자를 상대로 채권·채무관계를 협의하고 조정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전통적으로 은행 등의 공적 신용공여 행위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비자 신용 역사가 일천하여 이와 관련된 문제발생 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파산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크게 미비되었던 점이다. 이런 여건에서 1~2년 사이 대규모로 발생한 신불자 문제는 가히 전대미문의 큰 충격이었다.

이런 사실은 문제발생 초기에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었는가 하는 의문을 낳는다. 어떤 종류의 문제이든지 그것이 국가경제 전체를 위협할 만큼 커지는 것을 막는 것이 정부, 특히 금융감독 당국의 기본적 책무이다. 특히 그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외부충격에 의해서 발발한 것이 아니라 전부해서 30개 남짓한 신용카드사 영업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이 카드사들의 공격적 현금서비스 영업확장이었다. 감독당국은 이런 문제의 핵을 제거하려 하기보다는 수수료 인하에 더 관심을 보였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일부에서 보기에는 수수료가 턱없이 높아 보일 수 있으나 당시 카드사들이 추구하던 영업방식에 대한 적정 보상수준일 수도 있다. 즉 카드사들은 상당히 다양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일종의 무분별한 단기 현금대부업이라는 고위험-고수익 전략에 전념하고 있었다. 당연히 높은 위험도를 감안하면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그런 영업행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다면 현금대부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공법일 것이다. 2002년초경에는 카드사들의 편중된 영업 행태로 인한 부작용이 충분히 드러난 상태였다.

금융감독 당국의 기본 책무는 대중적·정치적 이슈가 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보다는 금융 전문가적인 소견에서 국가 금융제도와 국민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제어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감독당국은 신불자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큰 변화를 겪으며 통

합·강화된 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장경제 질서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거시경제 분야를 포함하여 경제정책 담당자들의 문제의식 결여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당시 정부 내에 카드사發 경제불안 요인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모자랐던 것은 결국 당국이 카드관련 대출의 폭발적 증가가 서비스 분야 자영업 창업 붐의 돈줄이 되었던 것과, 서비스 소비의 빠른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일시적으로 활황세를 보이던 모습을 직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¹⁴⁾

2. 문제 본격화 시기의 정책선택, 책임정도와 유리된 균등 비용분담

2002년 이후 거시경제 환경의 개선이 없자 채무 불이행이 늘면서 신용불량문제는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정부가 문제가 커진 것을 인지하고 개입을 했지만 원칙 있는 처리보다는 문제축소를 위해 임기응변적 대응에 치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2002년말에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악화시킬 문제를 키우지 않으려는 고려가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수동적 점진주의 방식 채택에 따라 결과적으로 국가경제 전체가 치른 비용은 초기에 부실 카드사의 과감한 정리로 대응했었을 가상적인 경우의 비용보다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비용으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항목은 정부의 문제축소 지향

14) 김홍범(2004)도 동일한 맥락의 지적을 하고 있음.

적 접근에 따른 책임과 비용분담간의 괴리이다. 즉 정확한 책임 소재 규명과 그에 따른 비용분담보다는 무차별하게 총비용을 관련 당사자수로 나누는, 즉 1/N 방식의 비용균등분담을 강행하였다. 이런 문제해결 방식은 시장참가자로 하여금 바람직하지 않을 정도의 위험을 떠안는, 즉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보이도록 하는 여건을 성숙시킨다. 즉 나의 위험을 무시한 공격적 영업이 성공하면 1개의 성과를 독식할 수 있는 반면 실패했을 경우 내가 분담하여야 할 비용은 1/N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면 위험을 무시한 공격적 영업행태가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2002년 하반기 들어 신용불량문제가 서서히 본격화됨에 따라 그동안 카드사들의 외형확장으로 발행량이 크게 증가한 유통시장의 카드채 부문이 불안해지면서 금융시장 안정에 중요한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부각됐다. 이 경우 카드채 문제의 직접 당사자는 카드채 발행 카드사와 카드채 보유 금융기관이었다. 정부는 당사자 해결원칙을 무시하고 카드사, 카드채 보유 금융기관 등의 협상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타협에 의한 손실분담과 부실 카드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3. 신용불량자 구제 정책

문제가 커지고 심지어 거시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 이르자 그동안 양산된 신불자들에게 대한 구제조치는 불가피했다. 이 단계에서라도 정부는 책임소재에 근거한 비용분담원칙을 시현시킬 기회가 있었다. 원칙적으

로 바람직한 처리방안은 처음 카드 사용자가 카드를 발급받았던 시점으로 돌아가 발행사가 피발행자의 변재능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있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즉 카드사가 사용액 상환능력이 없는 사용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였는데 카드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다면 발행자 책임이 크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 책임이 더 크다 하겠다.

카드 발급과정에서 이런 적절한 과정(Due Diligence) 수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감독당국과 같은 객관적인 제3자가 해야 한다. 극단적인 경우 전혀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 없이 신용공여가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 발생한 채무 불이행은 전적으로 카드 발행사의 책임으로 보아야 한다. 누구도 카드사로 하여금 그 사용자에게 카드를 발행하도록 강요한 것이 아닌데도 대금업을 하는 카드사가 신용공여라는 특전을 부여했으므로 이런 행위는 증여로 보아야 더 타당할 것이다. 이럴 경우 채무전액 면제가 합당하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 사용자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신용공여를 받았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은 아마도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이다.

그런데 신불자 구제제도의 중요한 축이 신용공여행위를 했던 금융기관에 맡겨졌다. 당연히 관련 이해당사자인 이들은 위와 같은 책임소재 판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신불자에게 제공되어 문제가 된 신용공여가 과연 그 당시 평가된 변제 능력에 합치했는가 하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조건 향후 변제능력만을 고려해서 유예, 일부 면제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또 다른 형태의 비용균등배분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부담에는 직, 간접 방식의 공적자금이 사용되므로 관련당사자에는 일반 납세자들도 포함

이 된다. 최근 발표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구제대책이 원인제공에 대한 판단이 결여된 구제책의 예이다.

이 방안의 제목 자체가 모순적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대상 신불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분으로 애당초 문제가 되는 신용공여를 받았다면 변제능력이 없는 사용자에게 신용을 제공한 당사자의 책임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KAMCO를 통한 납세자가 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신용공여기관이 관련 채무액을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할 것이다.¹⁵⁾ 재경부의 2005년 10월 국감자료에 따르면 7월 말까지 자산공사가 137억원을 들여 약 41천 명의 대상자의 채무를 시장가격의 약 50% 수준으로 매입하였다. 관련 채무원금이 6,912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대출 금융기관들이 상당한 손해(Hair-cut)를 감수한 셈이다. 하지만 손해분담 정도가 더 높아야 될 경우도 상당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¹⁶⁾

4. 시사점: 자의적 시장개입 중지하고, 불가피한 적기시정조치는 과감히 펼쳐야

본 연구의 검토는 다음과 같은 그동안 간과된 사항들과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수요측면에서 자영업자 창업목적의 자

15) 전술한 자료에 따르면 매입대금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금융기관에 우선 지급하고, 한국은행에서 저리자금 지원으로 보전할 예정이다.

16) 이들 중 신용카드 관련 규모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전체 신청자들 중 채무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사람의 수가 90%가 넘고 있다. 그 중 상당부분이 신용카드 관련인 것으로 추정된다.

금사용이 소비관련 사용보다 더 중요하게 신용카드 거품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형태별로는 구매목적 사용보다 현금대출이 문제의 원천이었다. 따라서 신불자 문제가 신용에 대한 개념이 빈약한 청소년층의 분별없는 사용에 기인한다는 그동안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 공급측면에서 카드사들은 고수의 추구를 위한 고위험 전략을 따랐으며 이는 고위험 상황 발생 시 회사의 실질적 부담을 전체 발생 비용보다 낮게 계산하는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의 발로였다. 카드사들이 카드 관련 대출을 이용하여 소액대출시장을 잠식하여 수익제고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몸집을 키움으로써 일종의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입지를 도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한 가지 시사점은 카드사들의 책임이 매우 컸으며 처리과정에서 보다 더 큰 부담을 져야 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 2002년 이후 거시경제 상황 악화의 영향은 그 자체가 결정적 문제 촉발요인이 아니다. 이는 그보다 더 큰 '97~'98 외환위기 때 엄청난 부정적 거시경제 충격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은 데 근거한다. 신용카드 사용의 양적 폭발과 동시에 진행된 신용의 질 저하가 오히려 더 큰 문제의 원인이었다.

네 번째, 정책당국은 각 단계에서 문제를 키우는 유인을 제공했다. 문제발생 이전인 1999년경 신용카드 발행의 폭발적 증가 용인, 현금서비스 한도 철폐 등의 조치는 이 문제 태동의 중요한 近因이었다. 그 이후 초기 개입단계에서 초점이 분산된 미흡한 대응으로 문제핵심을 제어하지 못했다. 문제 본격화 단계에서는 단기적 문제 규모 축소에 매달린 임기응변식 대응으

로 원칙에 의거한 비용분담 처리방식을 시행하지 못했다.

다섯 번째, 이런 출생역사를 가진 신불자 문제는 그 규모가 한때 경제활동인구의 18%에 이르는 등 엄청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정부의 개입을 불가피하게 했다. 특히 소비자 신용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관련제도 정비와 구제방안 시행이 동시에 이루어져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동안 이 문제의 확대에 따른 각종 관련 제도 및 규범의 정비는 뜻하지 않았던 긍정적 부산물이다. 하지만 그 비용이 상당했다.

여섯 번째로 통합·정비된 금융감독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불자 문제가 생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거품이 커졌고 급기야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명목상 및 제도상 독립된 금융감독체계를 갖추는 것만으로 주요 금융시장 불균형을 예방하는 데 충분치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가지 가능성은 감독당국의 문제 판단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또는 감독당국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시정하려 하였으나 상위 정책당국이 여론이나 정치적인 고려를 중시하는 다른 판단으로 감독 실무자들의 노력을 무산시켰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으면 문제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 속단할 수 없다. 다소 깔끔하지 못하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시장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해결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가부장적 정부의 개입에 대한 기대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경제활동을 왜곡시키는禍과 같은 존재로 남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아 문제발생 시 최대한 당사자 비용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모든 문제가 국가경제 위기로 이어진다는 강박관념과, 관련 당사자들

간의 합리적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속한 정부개입이 항상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자기 능력 과신을 극복해야 한다. 시장경제 메커니즘에 의존한 해결방안 모색을 불신하는 시각에서 보면 관련 당사자들의 자율에 의한 문제해결이 매끄럽지 못해 보일 것이다. 사실 이해 당사자들은 정부 개입이 유리할 경우 여론 조작 등을 통하여 당연히 정부에 압력을 가하려 할 것이다. 이런 시각은 시장 참가자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더욱 조장하고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와 같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창궐하는 풍토를 조성하게 된다. 정부가 이와 같은 시각에서 탈피해야만 향후 유사문제 발생 시 관련 당사자들이 자발적 해결과정을 모색하려 할 것이며 그것이 최대한 합리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보장할 것이다.

참고문헌 |

- 김병덕·이건범, 『신용카드시장의 건전화 및 효율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2. 4.
- 김재진·김진수·홍범교, 『신용불량자 증가의 원인분석 및 대책』, 한국조세연구원, 2002년 12월.
- 김홍범, 『한국 금융감독의 정치경제학』, 지식산업사, 2004.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신용카드 종합대책 추진”, 보도자료, 2002년 5월 23일.
- 박주영, “가계부채가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산은조사월보』, 2004.
- 이명환, “카드채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제언”,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동향』, 2003. 4. 5.~4. 12.
- 이인실·배상근·김창배, 『최근 가계부채 급증현상과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3년 1월.
- 여신전문협회, “신용카드 업계현황”, 2004년 12월.
- 이장영, “카드채 문제의 근본적 해소방안” mimeo, 한국은행 토론회 발표자료, 2003년 5월.
- 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 각종 200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5년 9월, 10월(www.mofe.go.kr/public/info10_2_5.php).
- 재정경제부, “신용불량자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방향”(정책해설자료), 2005년 3월 29일.
-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방안”(보도자료), 2005년 3월 23일.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영세 자영업자 대책”(보도자료), 2005년 5월 31일.
- 지동현, “2001년 신용카드사업의 리스크관리”,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동향』, 2001.
- 최공필·이건범·이명환·이병호·한상일, 『최근 가계금융부채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정책조사보고서 2002-03 2002년 6월.

- 최공필·이건범·이명활·임병철, 『신용불량자 급증의 원인과 대책』, 한국금융연구원, 정책조사보고서 2004-01, 2004년 4월.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국제경제팀, 『신용카드시장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3. 1. 16.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호.
- 홍종원, “신용불량자 대책-금융이용자보호제도를 중심으로”, 신용불량자문제 해결 포럼 발표자료, 2004년 7월.
- 한국산업은행 경제이슈, 「신용불량자 구제제도」, 『산은조사월보』, 2004년 8월.
- 한국개발연구원 국내경제이슈, “카드채권 시장의 유동성 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한국개발연구원, 2003년 7월.